

# 절체절명 위기의 호남정치



데스크칼럼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kwonbeom.choi@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대명(어차피 대명은 이재명)'의 대세론 속에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85.40%이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획득, 당 대표로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28 전당대회 득표율인 77.77%를 훌쩍 넘어서며 압도적인 당심을 확인했다. 이 대표의 당선은 민주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강성 팬덤층의 열렬한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했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는 전국 권리당원 선거인단 122만2104명 중 51만551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18%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 투표율은 광주 25.29%, 전남 23.17% 등으로 모두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공천 갈등과 여당에 대승을 거두고도 이렇다할 혁신과 쇄신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호남민심의 표출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호남 유일의 후보임을 내세워 지도부 입성을 노렸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민 의원은 최종 득표율 9.05%를 기록, 총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7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지도부 입성이 좌절됐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다 호남 대표 주자임에도 전국 권리당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지 못한 게 패착이었다. 실제 민 의원은 광주지역 경선에서 겨우 27.77%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전남에서도 21.68%라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21대 이후 전남의 서삼석 의원, 광주의 송갑석 의원에 이어 3차례 연속 광주·전남 주자들의 지도부 진출이 무산됐다.

지역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으로는 지난 2016년 8·29 전당대회와 2020년 8·27 전당대회에서 잇따라 지도부에 입성한 양향자 전 의원이 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주승용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광주·전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전무하다.

이제 지역 정치인들의 민낯이자 현주소다. 민 의원의 탈락으로 그동안 줄곧 지적돼 왔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낮은 인지도와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산하지 못하는 호남 정치력의 한계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 정치권은 세력 및 세대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호남민심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총선 때마다 거세게 불어닥친 현역 물갈이 바람으로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져 조직 동원력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이다.

이번에도 지역 출신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호남정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뼈저린 자성과 함께 어떻게든 국회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호남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적 의제를 제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호남정치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고, 지역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도 호남정치 복원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 보여줬듯이 민주당을 향한 텃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의 근간인 호남을 변방으로 치부해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없다. 돌아선 호남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선 당장은 신임이 대표가 결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는 게 급선무로 여겨진다.

## 社說

# 호남정치 자존심 언제까지 구길텐가

## 민주당 전대 최고위 입성 무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광주지역구인 민형배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호남권 단일주자란 상징성에도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호남정치 복원'이란 꿈이 또다시 좌절되면서 호남 정치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모양새다. 민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회 정기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7위로 마감하며 낙선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김민석 후보가 최종 함께 18.23%로 1위, 전현희(15.88%), 한준호(14.14%), 김병주(13.08%), 이연주(12.30%) 후보가 2~5위를 차지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번 전대에서 호남출신의 '이재명 지도부 시즌 2' 탄생에 기대감이 컸다. 민 후보는 호남의 대표적인 친명계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 광주 유일의 재선 의원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임을 자청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

법을 위해 탈당했다가 복당으로 전국적 이슈를 탄바 있다. 그럼에도 민 후보가 고전한 것은 인지도 부족과 수도권 중심 정치의 한계가 커 보인다.

과거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대 최고위원 선거에서 서삼석 의원(11.11%)이 고배를 마셨다. 2022년엔 송갑석 의원도 득표율 10.81%로 6위에 그쳤다. 벌써 4번째 무산이다. 호남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호남 정치권이 입은 충격도 크다. '민주당 심장부'라는 말을 하기도 무색할 정도다. 임명직으로 자리를 채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호남 정치' 복원이 절실하다. 호남과 지방을 대변할 정치인을 키우는 것도 급선무다. 정치의 주도권이 수도권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지방' 의원이라는 한계도 핑계에 불과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에 눈치만 보는 지역정치권의 꼴사나운 모습이 근절돼야 한다. 호남정치권이 정치력과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 애써 키운 벼 뒤 엮는 농민, 외면해선 안돼

## 쌀값 시장 아닌 '정부의지' 중요

정부가 올해 45만톤 규모의 쌀을 공공비축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쌀값은 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농협이 보유한 10만 톤에 달하는 재고 감소 대책마저 지연되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19일 영광에서 논을 갈아엎는 등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정부의 매입안이 쌀값 안정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이 가루 쌀 4만 톤과 친환경 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모두 45만 톤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 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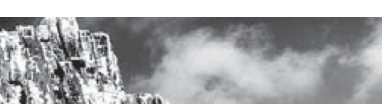
하지만 농민들은 공공비축 매입안으로는 쌀 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쌀값 안정 대책은 과잉생산된 쌀산업의 구조를 개선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조합이 재고 부담으로 저가 판매를 지속하고, 쌀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이 영광에서 논을 갈아엎으며 나락값 8만원 보장과 직불제 공약 즉각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적정한 수준의 쌀값은 농민의 소득 보장과 식량 안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다. 정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국농민회의 주장처럼 '쌀값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맞다. '10만 톤 재고'를 줄이기 위한 농협의 노력도 필요하다.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제9호 태풍 '중다리'가 북상하고 있는 19일 전주시 전주기상지청에서 예보관들이 태풍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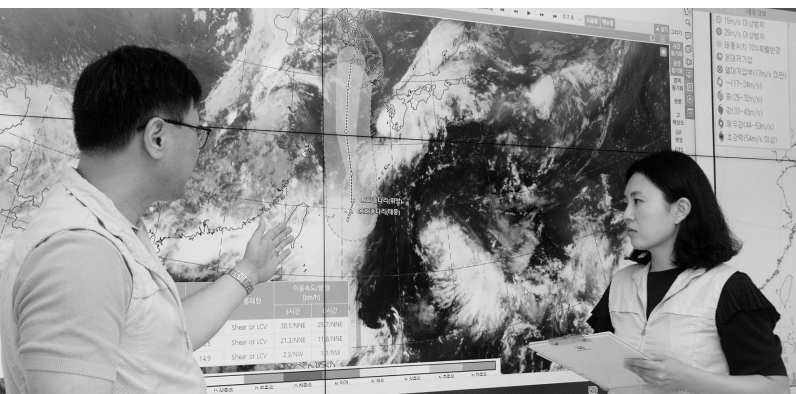
학이 글로벌대학30으로 예비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 기준이 되는 지역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다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실현을 위해 세계 유일 친환경 분야 연구센터 기반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산업 혁신 선도에 나섰다. 동신대 연합은 전남도를 비롯한 6개 전남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공공형 UCC-I·N·G 캠퍼스 구축을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록 지사 또한 앞장서서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대응 대학협력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종 선정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미 전남은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2024년 현재 전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 위기'로,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불균형에 사람들은 지속해서 전남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인적, 물적 자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존재다. 지방에서 태어난, 지방을 찾은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각 지역만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전남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남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 서석대

전남도는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복지 등 생애 전 주기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현재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교육. 실제 지난달 30일 전남도는 순천·여수·담양·구례·곡성·화순·함평·영광·장성·해남 등 전남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1차에서 선정된 7개 지역을 포함하면 22개 시군 중 총 1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전국 최다' 성과다.

이에 오늘 예정된 글로벌대학30 본지 **글로벌대학30 지정 '필수'** 정 대면평가에도 관심이 모인다.

'글로벌대학30'은 정부 추진 대학 혁신 프로젝트로, 지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 단일 공모로는 역대 최고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지역 대학 30개를 선정해 최소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국비 지원 및 규제개혁 등 대학 내외부 혁신 지원과 더불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라이즈(RISE) 체계 선도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전남은 지난해 순천대 글로벌 대학 지정에 이어 계획 발표 전부터 대학 대상 설명회 개최, 예비신청을 위한 혁신기획서 작성 지원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국립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등 총 2개 지역대



이미 전남은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2024년 현재 전체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 위기'로,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불균형에 사람들은 지속해서 전남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인적, 물적 자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존재다. 지방에서 태어난, 지방을 찾은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각 지역만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전남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남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